

균형발전이 미래이다.



성정릉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지금 세계는 한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는 세계화가 진행되는 한편, 유럽연합·나프타·아펙 등 경제의 블록화와 민족주의 대두 등 분절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급부상, 일본의 역사왜곡 및 영토분쟁, 북핵문제 등으로 냉전기의 질서가 급격하게 변화될 전망입니다.

국내적으로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요소투입형 성장 전략과 수도권 일극 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을 추진한 결과, 압축적 산업화를 통해 일인당 1만불을 달성하며 중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침체, 국민분열 및 지역갈등, 국토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으로 국가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내의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력을 증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지식·기술 중심의 혁신주도형 발전 전략과 국가균형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제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혁신에 대한 의지와 변화의 속도가 국가의 명운을 가늠하는 일대 변혁기를 맞아 선진각국들은 혁신주도형 발전패러다임을 채택하여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가의 지속적 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수의 특정지역이 아닌 국가의 모든 지역에서 혁신역량의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요소투입형 불균형발전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한국으로 제도약하기 위해 집권초기부터 최고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가균형발전을 제시하였고, 균형 없는 집권·집중을 지양하고 혁신을 통해 성장과 균형이 병행하는 새로운 분권·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은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제도약이며, 목표는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의 실현에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분야의 16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안별로 가지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의 자립화를 위한 균형발전의 기반조성(균형정책)을 위해 지난 6월말 발표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포함하여 신활력지역의 개발촉진,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자립형 지역개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혁신을 통한 혁신주도형 발전(혁신정책)을 위해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지원, 지방대학 육성 및 인적자원의 개발, 산학협력 활성화, 대덕 R&D 특구 육성, 국가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특성화 발전을 통한 지역별 경쟁력 강화(특화정책)를 위해 시·도별 4대 전략 산업의 진흥,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제도적 기반위에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제도운영)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균형발전사업 평가체계의 확립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03년부터 지난 2년 반 동안 4대 분야의 16대 과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기반구축을 완료하였고,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구축 및 균형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정책의 실행 단계에 접어들어 '05년부터는 핵심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통해 성과의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의 추진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시도별 배분방안과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한 혁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의 인재양성정책, 지방의 R&D 비중확대, 지역전략산업의 집중 육성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정부에서는 부처별·사업별로 개별 추진하던 지역사업을 중앙부처 공동추진단을 통해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자율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광역 14개, 기초 116개), 지역혁신연구회(14개), Inno-Cafe(24개), 산업단지 미니클러스터(41개) 등이 운영·가동 중에 있으며, 학계·언론계·NGO를 중심으로 자생적 포럼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균형발전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한편,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지역전략산업 육성, 신활력사업 등 핵심선도과제에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조기에 확산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혁신기반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강화하고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할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지방분권정책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패키지 정책으로 참여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획대로 실천할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에 상생과 연대, 대타협과 양보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각종 규제로 인해 발목이 묶이고, 지방은 지방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참여정부는 전국의 모든 지역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며, 지방은 스스로 자립하겠다는, 균형발전은 지방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자세와 노력을 기대합니다.